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담당: 박원석 723-4250) 여성단체연합(담당: 조영숙 273-9535) 환경련(담당: 최예용 723-425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문의: 위 연락처 및 담당자)
제 목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보도자료
날 짜 1998. 6. 15. (총 3쪽)

보 도 자 료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 구성촉구
-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환경련등 시민·사회단체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

일시장소 : 1998. 6.15일(월)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앞(광화문 빌딩까지 행진)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중),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한명희)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진현·신경림·이세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6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가칭))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집회에서 "구기득권 세력과의 단절과 개혁주체의 형성", "관료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단행", "공정한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기반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국가적 위기의 진상 및 책임 규명과 개혁의 전환점 형성을 촉구하였다.
3. 아울러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조사, 보고서작성, 청문회개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및 소추의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4.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월 18(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 각계의 사회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긴급 시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5. 집회에는 주종환(참여연대 고문),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열(환경련 사무총장), 지은희(여성단체연합 대표)를 비롯해 각 단체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끝

※ 이하 <성명서> 참조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금 이 나라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비극적 실업사태와 노숙자들의 등장, 빈부격차의 확대와 전례 없는 '연쇄 자살사태',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부실과 불평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힘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가기반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위기는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성장체제를 바꿔야 한다. 총량적 성장주의를 버리고 '분배의 정의'와 '삶의 질'을 동반한 안정된 성장을 향해 국가발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성장전략을 주도해온 정치세력과 관료, 재벌의 지도력으로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역설했지만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또 이 두가지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정치도 모두 놓치고 있다. 정치·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개혁 세력은 건재한 반면 개혁의 주체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미명아래 국가를 파산시킨 관료들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정책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달라지는 것은 없이 고통만 전담한다는 불만과 불안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일찍 새정부의 개혁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수구,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개혁의 주체세력을 확고히 하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파산시킨 구인물을 등용하고 구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개혁' 일 수 없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구·기득권세력을 과감히 척결하고 개혁의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구관료와 기득권세력으로 채워진 정부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모든 개혁세력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적극적인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 강력하고 과감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라

더 늦기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한 사회·경제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재벌개혁과 행정개혁이 당면 사회·경제적 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다. 판치금융과 과점적 재벌체제로 인해 시장기능이 왜곡되어 있는 조건에서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금융·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정거래법등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과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한 관료조직의 혁신은 개혁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2차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판치금융과 재벌특혜등 부정부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제관료조직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

3.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라

국민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혁은 지지부진한 반면 실업과 세부담증가로 힘있는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고통의 분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는 형성될 수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고통분담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행정개혁등 과감한 개혁조치와 고용안정 노력, 사회보장제도 확충, 조세의 형평성 제고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

과거의 반민주적 전통과 단절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정치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침몰하는 배의 구명난 곳을 방치하고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계속 하겠는가. 온전한 규명 없이, 정치논리로 이를 덮어버리는 것은 개혁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외환위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위기의 본질과 진상을 축소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 엄청난 재난의 책임을 어떻게 강경식, 김인호 두사람의 단죄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 제몹집 불리기에 몰두하다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재벌, 그리고 그들간의 검은 유착관계에 있음을 단호히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서제출, 청문회 진행,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소추등의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보청문회'와 같은 요식절차로 그치지 않기 위해 국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뜻을 함께모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과감히 벌여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8년 6월 15일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